

데스크 시국



윤영기
체육부장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다.” 지난달 13일 치러진 광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 결과를 지켜보며 문득 이런 문구가 떠올랐다. 체육인들은 이상동 후보를 회장으로 선택했다. 이제 광주 체육계는 그와 집을 나눠 살아야 할 처지가 됐지만 그는 현재 형사사건 피고인이다. 변호사법 위반, 업무상 횡령,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송사는 체육회 업무와 무관하지만 그가 체육회장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공공의 문제가 됐다. 광주체육을 ‘격정해’ 출마했던 그를 이제 체육계가 ‘염려해야’ 할 처지다. 체육계는 이 상황을 감내해야만 한다. 그를 뽑은 당사자들이 바로 체육계이기 때문이다.

공정성 심판대에 오른 광주체육회

얼마 전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낙선자 두 명은 법원에 선거부효소송과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무자격 유권자 46명이 투표해 참가해 표결함으로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이 골자다. 체육인들은 당분간 법정에서 눈을 땔 수 없게 됐다. 법원 판단에 따라 광주체육회는 물론 체육회장 선관위와 낙선자들의 시비가 가려질 것이다. 하지만 정작 주목해야 할 것은 법원의 심판이 아니라 가처분 신청의 피고가 광주시체육회라는 사실이다. 시체육회가 소송 당사자라는 의미는 선거를 주재한 광주

은편칼럼



박현순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2019년 말 즈음에 출현한 코로나19(COVID-19)는 역사상 열 번째 역병으로 꼽힌다. 벌써 삼 년째, 꺼질 듯하다 살아나는 산불 같고, 여기저기서 머리를 쳐드는 것이 게임기의 두더지 같다. 최근에는 인도와 네팔에서 기승을 부린다. 네팔은 중국과 인도에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두 대국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 네팔인들은 중국에 유학생으로, 인도에는 근로자로 많이 나간다. 2020년 1월 27일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학생이 최초 코로나 환자로 확진된 후, 네팔 정부는 후베이성에 거주하던 175명의 자국민들을 전세기로 데려왔다. 이후 네팔은 인도의 코로나 상황과 밀접하게 연계된다. 두 나라 사이에는 비자 없이 육로로 왕래가 자유롭기 때문이다. 인도 정부가 3월부터 시행한 국가 봉쇄 조치 후, 일자리를 잃은 네팔 근로자들의 대규모 귀국 행렬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는 네팔 각처로 유입되었다. 네팔 정부는 공항 폐쇄로 외국인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했다. 학교와 공공 기관, 다중 이용 시설 역시

기 고



장은영
조선대 기초교양대학
자유전공학부 교수

누구에게나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일은 어렵다. 봄이면 새로 피는 꽃처럼 인간관계도 해마다 리셋(reset)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번 시작된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커져서 쌓일 뿐이다. 그런 걸 알기에 사람들은 되도록 불편한 상황을 피하려고 애쓰며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고개를 끄덕거리며 미소로 응대하는 편을 택한다. 크고 작은 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에도 원만한 관계를 위해 적당한 합의점을 찾는다. 동의할 수 없는 규칙과 질서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간혹 참지 못하고 언쟁이라도 벌이고 돌아온 날에는 밤새 얼마나 후회스러웠던가. 그런 날을 생각하면 이견이 있어도 적당히 물러나는 위선이 세련된 관계의 필요충분조건처럼 생각될 지경이다. 그러나 냉정히 돌아보면 합의의 미소가 지방하는 관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부끄러운 선거

체육회의 공정성이 심판대에 올랐다는 얘기가. 선거 후유증이 법정으로 번졌다는 사실보다 더 무겁고 두려운 일이다.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체육회가 자초한 불공정 프레임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더 뼈아픈 사실은 민선 들어 전국 시도 체육회 가운데 처음으로 보궐선거를 치른 광주가 타 시도에게는 답습하지 않아야 할 전철로 남았다는 점이다. ‘선거가 끝난 마당에 깨끗이 승복하지 않는 웅졸한 행위’라고 낙선자들을 비난해선 안 된다. 선거는 ‘오심도 경기의 일부’로 간주하고 넘어가는 운동 경기가 아니다. 광주체육의 미래 지도자를 뽑는 일이다. 여기에 불공정과 부당의 소지가 있다면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이런 기초적인 분별마저 없다면 광주체육에는 희망이 없다.

사실 송사와 논란을 초래한 원죄는 선거를 설계한 광주시체육회에 있다. 애초 불공정 시비는 체육회가 마련한 유권자 가이드라인에서부터 불거졌다. 유권자 선정에서 중목 단계 60개 가운데 절반가량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체육회는 ‘참정권 제한’이라는 체육계의 이의 제기와 거센 항의에도 어쩔쩔 넘어가려 했다. 이 문제를 거듭 지적했던 한 선관위원은 “선거인수 배정 기준 등에 불공정 소지가 있는 선거 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항의하며 사퇴했다. 이후 체육회에서 유권자 가이드라인을 수정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지만, 중견 언론인인 그가 직을 던지면 서까지 각성을 촉구하지 않았더라면 진즉 판이 깨졌을 것이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무자격 유권자 가처분 신청에 앞서 선거 중지 가처분신청이 먼저 제기돼 선거가 장기간 표류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광주시체육회가 중립과 공정을 의심받는 대목은 또 있다. 선거 업무를 담당하는 한 간부가 업무에서 배제된 데 이어 또 다른 간부와 함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구설수에 오른 것이다. 이들은 ‘생활체육계를

지원한다는 의심’을 샀으나 선관위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그렇다고 이들의 사례 값지 못한 행동까지 면죄부를 받기는 어렵다. 체육계에는 이미 올 초부터 “체육회장이 일신상 사유로 사임할 것이고 그에 맞춰 특정 진영에서 후보자를 옹립하기 위해 인사들을 접촉하고 있다. 체육회 일부 직원도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들이 진즉 체육회를 둘러싼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경계했다더라면 선거 업무를 맡는 사람으로서 선관위 심판대에 오르는 지욕은 없었을 것이다. 또한 ‘체육회가 특정 진영과 후보를 밀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기획설)를 듣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어쩌다 개혁 주체 아닌 대상이 됐다

광주 체육계를 절망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지점은 선거에서 드러난 부패다. 물론 이번 선거는 대의원 284명이 투표하는 간접선거 방식이어서 이전부터 금품을 돌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돌긴 했다. 그래도, 아무리 맘만 먹으면 가능한 일이라 해도, 지금은 21세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다. 한데 한 후보로부터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며 선거운동을 자청하거나 표를 팔겠다고 나서는 이가 한둘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상대편의 약점을 듣고 와서 그대로 금품을 요구하는 제안도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선거 브로커들의 행위가 표식에 영향을 미쳤다면 체육회장 선거는 참담한 실패이며 이를 근절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연거푸 실패할 것이 자명하다. 광주체육회는 여러 곡절 끝에 회장을 뽑았지만 잃은 게 적지 않다. 그중 공정과 신뢰 상실은 치명적이다. 이번 선거에서 얻은 게 있다면 단 하나, 광주 체육계는 여전히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 점이다. /penfoot@kwangju.co.kr

네팔의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며

폐쇄하고 각종 경제 활동을 강력하게 규제했다. 이를 어기고 시내에 나온 시민들을 경찰은 구타·연행하기도 했다. 이때쯤, 외국인 산행객 500여 명이 히말라야 산속에 고립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주요 국가들은 서둘러 전세기로 자국민들을 데려갔다. 한인 사회에서도 노약자 중심으로 일시 귀국을 서둘렀다. 2015년 4월의 네팔 대지진에 이어 두 번째 일이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자 네팔 병원에서는 적절한 치료가 불가능해서 환자들을 강제 퇴원시켰다. 농축 산소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공기 중의 20%나 되는 그 흔한 산소는 이를 포집, 농축해서 일정 압력으로 공급하는 산소발생기가 없으면 코로나 환자들에게 그림의 떡이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 결과 3월 중 일일 신규 확진자는 100명 미만, 사망자는 한두 명이고 확진율은 미미했다. 선진국에서 많은 희생자가 나온 반면, 인도와 네팔을 포함하여 아시아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잘 견디는 것 같았다.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장기간의 활동 제한으로 인한 우울증, 생활고도 자살하거나 굶어 죽는 숫자가 훨씬 많다고 했다. 네팔 정부는 7월 들어서 제한 조치를 풀었고 근로자들은 서둘러 인도로 돌아갔다. 인도 봉쇄는 6월에 해제된 상태였다. 금년 들어서는 인도의 4월 축제 기간에 1억 인파가 갠지스강에 몰렸고 방역은 느슨했다. 이는 필연적으로 코로나 2차 대유행을 야기했듯 매일 40만 명에 가까운 신규 환자를 양산했다. 인도의 코로나는 수많은 변종 바이러스와 함께 곧바로 네팔에 영향을 미쳤다.

네팔의 금년 설은 4월 14일이고 이때를 전후하여 각 부족 축제가 잇따랐다. 네팔의 코로나 2차 대유행으로 정부는 4월 20일부터 다시 활동 규제에 돌입했다. 첫 번째 규제 이후 13개월 만에.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는 1차보다 훨씬 빠르게 퍼졌고 단기간에 수많은 사망자를 냈다. 5월 중 신규 확진자가 매일 8000명을 웃돌고 사망자는 200명에 가까웠다. 5월 말 우리나라의 누적 사망자가 2000명 미만인데 비해, 네팔 인구 3000만 명에 누적 사망자가 7000명을 넘어섰다. 확진율은 45% 안팎, 즉 검사자의 절반 가까운 수가 코로나 양성으로 판명되었다. 6월 들어 다소 진정되는 추세지만 전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2차보다도 짧은 간격으로 올 수 있는 3차 대유행을 우려하며 네팔 정부는 규제 위반자들에게 징역과 벌금 등 엄벌을 예고한다. 과학문명의 발달로 우리는 100세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를 지켜보면서 마음이 착잡하고 생각이 깊어진다. 눈에 보지 않는,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에 있는 바이러스에 무너지는 약한 존재가 인간이다. 코로나19로 제한받는 것은 대외 활동뿐만이 아니다. 마스크 입고 코를 막으니 들숨과 날숨 또한 편치 않다. 그래도 산소농축기 없이 숨 쉴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호흡과 생명이 직결된다는 것을 평상시에는 의식하지 않고 살아왔다. 호흡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어지는 것, 절대자의 선물임을 새삼 깨닫는 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계의 실상은 작은 불일치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알박한 것이거나 계약적, 위계적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데도 우리는 왜 다른 생각을 드러내기 어려운 것일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배려인가 아니면 논쟁과 싸움을 피하기 위한 것인가. 어떤 경우든 관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섞여 있을 것이다. 불일치의 표명은 관계를 균열시키거나 자신이 속한 집단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자신이 그 관계로부터 추방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동반한다. 그런 두려움은 불일치를 표명하는 일이 타인이나 공동체 등 자신의 외부로 향한 것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내재된 감각의 문제임을 말해주는데,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것이 감각의 자율성이다. 자기 랑시어로는 합의(consensus)와 불일치(dissensus)를 정치적이고 미학적인 차원에서 논의했던 철학자이다. 그가 보기에 합의란, 불일치를 없애고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정치적 행위이다. 합의의 정치는 구성원들에게 각자의 고유한 자리와 역할 그리고 사고와 감각을 분배함으로써 체제를 지배한다. 그런데 랑시어로는 이미 분배된 것을 거부하고 재분배를 요구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진짜 정치라고 주장한다. 평등하고 자율적인 의사가 표명되는 진짜 정치를 위해 랑시어르가 강조했던 것은 지배 체제가 강제하는

감각 체계를 거부하고 자신의 감각을 개발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자발성이다. 기존의 질서와 합의에 길들여지지 않은 감각이야말로 권력으로부터의 해방과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물론 사적이든 공적이든 모든 관계는 합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다. 그런데 합의와 신뢰는 상수항이 아니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라면 합의는 불일치를 통해 해체되거나 재조정됨으로써 서로를 더 자유롭게 만든다. 그리고 지배와 종속이 아닌 평등한 관계에서 싹트는 신뢰는 위선적 동의보다는 진실한 반대를 받아들임으로써 믿도를 높인다. 대학이라는 장소에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신입생들에게 감각의 자율성을 경험하며 믿도 높은 신뢰의 관계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하고 싶다. 대학이, 불편함을 피하기 위한 합의의 제스처가 통용되기보다는 자신의 감각과 목소리를 드러내며 자율성을 실현하는 관계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의견의 분분함과 엇갈림은 우리 자신을 조금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만약 그 불편함이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의 대가라면 기꺼이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닐까? 벗꽃이 툭툭 터지는 학교를 걷다가 잠시 머리 위를 올려다본 적이 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흔들리는 벚꽃의 분분(紛紛)함이 어지럽고도 아름다웠다.

社說

차지단체장들 공약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민선 7기 전남 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의 공약 이행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를 앞두고 쏟아낸 공약들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남 지역 시장·군수들의 공약 이행률은 46.53%로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전국 15개 시도 중 충북(41.23%)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다. 공약 이행률은 전체 공약 가운데 사업이 완료됐거나 입법·재정 확보 등을 이행한 후 계속 추진 중인 공약의 비율을 말한다. 전남 기초단체장들의 경우 1498개 공약 중 완료된 것은 207개(13.82%)에 그쳤고, ‘이행 후 계속 추진’ 중인 것은 490개(32.71%)였다. 또한 728개(48.60%)는 ‘정상 추진’, 44개(2.94%)는 ‘일부 추진’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폐기 또는 보류된 공약도 247개나 됐다. 이처럼 공약 이행이 부진한 것은 이를 뒷받침할 재정 확보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전남 기초단체장들이 전체 공약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36조 1284억여 원에 달했으나 확보한 예산은 17조 8076억 원으로 49.29%에 불과했다. 특히 합평은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율이 5.36%에 그쳤고 구례(19.55%)·여수(20.84%) 등도 저조했다. 현재까지 이행 실적을 감안하면 불과 1년 남은 민선 7기 동안 나머지 공약들이 제대로 실현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는 단체장들이 실현 가능성을 따져 공약을 내놓기보다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 탓이 크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이러한 전철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이 내놓는 공약들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

‘강제징용 피해 외면 판결’ 우리 법원 맞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 등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 합의 34부가 최근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으로, 결국 일제의 불법 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은 2018년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재판부는 1965년 한국 정부가 일본의 자금 지원을 대가로 대일 청구권을 포기한 한-일 청구권협정의 문언과 체결 경위 등을 볼 때 강제징용 피해자도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대법원은 청구권협정문이나 체결 과정에서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언급하는 내용이 없는 만큼 강제징용이라는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는 한-일 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황당한 논리로 점철된 이례적

인 판결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재판부는 “청구권 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에 큰 기여를 했다”고 했다. 과연 이러한 판결이 우리 법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황당하다. 게다가 “일본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결국 우리 안보와 직결된 미국과의 관계 훼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등 사건 쟁점과 무관한 주장까지 판결문에 담았다. 피해자 소송 판결도 강제 집행이 이뤄질 경우 “국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역효과 등까지 고려해 보면 국가의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엄청난 논리 비약이 아닐 수 없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법관으로서의 독립과 양심을 저버린 판단’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도 어떻게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거듭 상처를 줄 수 있느냐며 반기고 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상급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無等鼓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현재 여권의 위기 상황을 ‘변화맹시(變化盲視, change blindness)’라는 한마디 말로 규정했다. ‘변화맹시’는 주변의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는 현상을 뜻하는 심리학 용어다. 선행적 경험이나 주관적 선입견에서 벗어나지 못해 의도적으로 한 부분을 변화시켜도, 눈앞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민심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서 위기를 초래했다는 평가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촛불 정국’ 이후 2017년 대선 승리 에 이어 2018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거두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거푸 승리했다. 한 대통령의 임기 중 여당이 대선과 지방선거 및 총선까지 승리하면서 그런드슬랩을 달성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빠르게 변화하는 것이 민심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더 겸손하고 더 치열하게 혁신하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했다. 높은 지지율에 취한 나머지 오만함이 앞선 것이 중도층의 민심을 돌리게 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그동안 진

에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회의원 경험조차 전혀 없는 이 후보가 보수의 중심에서 ‘태풍의 눈’으로 부상한 것은 그만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민심이 빠르게 변해 가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일 것이다.

이준석 돌풍은 그동안 보수층이 연령대가 높은 60대 이상이었던 기존 상식을 깨트렸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빠르게 변화하는 신세대의 흐름을 ‘변화맹시’로 지나친 부분이 없지 않다. 민주당을 비롯한 기성 정치권은 이를 새로운 변화의 시작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최원철 정치부 부장 cki@

| | | | |
|--|---|---|--|
| 光 州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 | |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 |
|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내선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경제부 220-0663 사회부 220-0652 전담본부 220-0642 | (대표 FAX 222-4918) 문화부 220-0661 예향부 220-0692 사진부 220-0694 체육부 220-0621 |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